〈제주고사리삼〉

〈제주 상사화〉

〈애기더덕〉

〈왕벚나무〉

제주 고사리삼·왕벚나무 등 24종

세계적 멸종위기종 재분류

제주지역에서 자생하는 1천715종의 식물 중 8%에 해당되는 157종이 국내 극심 멸종위기종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중 24종은 세계적으로도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희귀종인 것으로 파악돼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김찬수 박사에 따르면 자생지가 확인된 1천715종에 대해 국제보전연맹(IUCN)의 '국내 수준' 및 '세계적 수준'의 멸종 위험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는 환경부가 제주지역의 멸종위기 야생식물 Ⅰ,Ⅱ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23종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 한라산참꽃나무는 이미 멸종됐고, 파초일엽은 자생지에서 절멸 돼 인위적으로 복원 식재됐으며, 산진달래, 줄석송, 물석송 등 3종은 지역수준에서 절멸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 수준의 극심 멸종위기종은 제주고사리삼, 제주상사화, 왕벚나무, 애기더덕 등 19종, 멸종위기종은 모데미풀, 각시족도리풀 등 4종, 취약종은 떡버들로 이들 24종은 세계적으로도 희귀종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먹다 남은 사골… 쓰다 버린 숯… 비벼 끈 담배꽁초…

친환경 비료로 '아파트 숲' 꾸몄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첨단대우아파트는 친환경 비료를 사용해 친환경 숲을 조성, 구랍 27일 환경운동연합에서 주관한 제 2회 환경아파트 시상식에서 '건강한 나무상'을 받기도 했다. 22일 오후 아파트 주민들이 산책로를 걷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아파트 속의 숲 광주 첨단 대우아파트

곳곳에 수놓은 화분, 폐 깡통·폐 타이어로 조성

주민들 스스로 일궈… 산책로·생태교육장 명소로

먹다 남은 사골과 쓰다 버린 숯, 담배 꽁초를 이용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흔히 쓸모없이 버려지는 이들 재료를 이용해 친환경 숲을 조성한 아파트 주민들이 있다. 10여년 동안 갖가지 아이디어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도심 속 숲 아파트'를 조성해낸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첨단대우아파트 입주민들이 그들이다.

큰 상도 받았다. 환경운동연합은 구랍 27일 제 2회 환경아파트 시상식에서 이 아파트에 '건강한 나무상'을 수여했다.

9개동 590세대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지난 1997년 입주할 당시만 해도 습지와 논으로 사용되던 곳에 지은 터라 식물이 살만한 여건이 못돼 죽어가는 수목들이 허다했다.

주민들은 2년 안에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해 건설사측에 물 빠짐 배수공사를 의뢰하고 나무들은 산성과 알칼리성에 맞게 따로 배치했다.

일조권과 조망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파트 앞에 있던 큰 나무는 인근으로 옮겼으며 음지에 있던 나무도 양지쪽으로 재배치하는 등 환경에 맞게 조경사업을 다시 했다.

수백 그루의 나무를 재배치하다 보니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도 있었다.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정문 입구에 웅장한 나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큰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려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회의 끝에 나무를 2m 가량 높게 심어 사고를 막았다.

이렇게 조성된 아파트 숲은 관리가 더 중요했다.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측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는 대신 친환경 숲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먹다 남은 소의 사골(四骨)을 모아 빻은 후 흙을 섞어 퇴비로 사용했다. 인(燐)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는 사골을 쓴 탓에 평균 3~5년 가량의 수명인 장미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꽃을 피우는 등 튼튼한 수목환경이 조성됐다.

또한 뿌리와 잎을 튼튼히 해주기 위해 주민들이 사용하다 버린 숯을 모아 곱게 빻은 후 흙과 섞어 뿌려주는 등 친환경 숲 조성을 위해 모든 주민들이 발벗고 나섰다.

친환경 비료만 사용하다 보니 이젠 진딧물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담배꽁초다. 담배꽁초를 모아 물에 담가 우려낸 것을 나무 주위에 뿌려주니 감쪽같이 없어졌다.

아울러 쓰다 버린 폐드럼통 등 폐깡통과 폐타이어를 카센터 등에서 무료로 받아와 화분으로 만들었다. 이들 화분은 인도와 차도를 나누는 분리대로 사용됐다. 딱딱한 '금지' 팻말이 붙은 도로보다는 활짝 핀 꽃이 반기는 도로를 만든 것이다.

주민들은 수년간 고생해 만들어진 이 곳을 자연학습장으로 만들기 위해 600여 그루 나무에 이름과 특징, 원산지 등이 적힌 이름표를 일일이 달아놨다. 덕분에 봄, 가을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방문해 생태교육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분위기 있는 산책로로 입소문이 나 방문객도 해마다 늘고 있다.

주민들은 수 년간 닦아온 단결심을 바탕으로 해마다 '노래자랑'도 열고 있다. 올해는 '작은 음악회'와 '어린이 사생대회'도 열 예정이며, 4천여권이 비치된 아파트 도서관도 만들었다.

해마다 두 차례 가지치기를 통해 모은 나뭇가지 등을 모아 장성·담양 등지의 땔감이 필요한 독거 노인들에게 보내는 '나눔' 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혜숙 관리소장은 "누구의 지시가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토론해 만든 숲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올해는 음지 식물을 충분히 심어 친환경 숲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밝혔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지중해 수면 50년새 최고 1m까지 상승

스페인 연구진 재난 경고

지중해의 수면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 50년 안에 최고 1m까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BBC 뉴스 인터넷판이 스페인 과학자들의 연구를 인용 보도했다.

스페인 해양연구소 학자들은 지난 1970년대부터 지중해 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관한 다른 연구들과 일치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인 지중해의 기후변화'라는 제목의 이 연구 논문에서 학자들은 지난 1990년대부터 해수면이 연간 2.5~4㎜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만일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해변 저지대들은 약간의 상승에도 "매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50㎝ 상승하면 '재난'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해양 환경 관리공단 때늦은 출범

해수부 해체로 법안 여러 부처 이관… 시행될 지 의문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만든 해양환경관리법이 지난 20일 시행되면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출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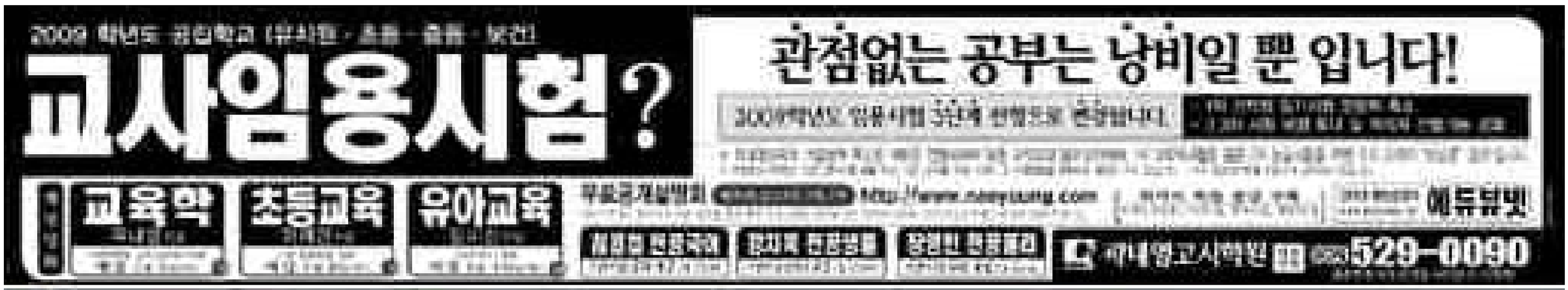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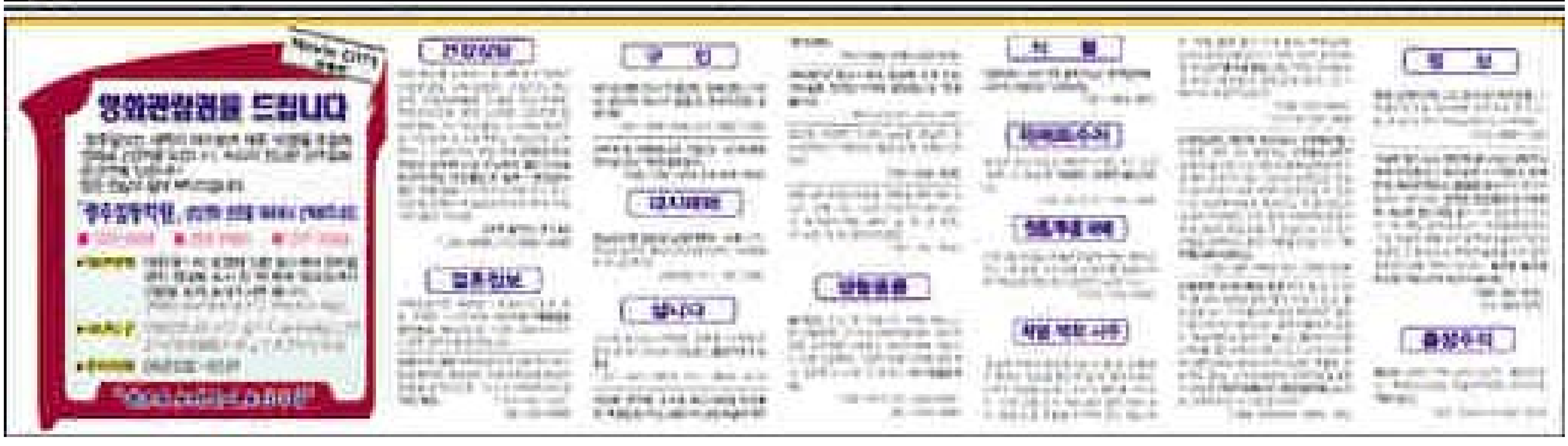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안에 따라 현 해양부가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 환경부로 분리되면 이 법도 각 조직에서 분리돼 시행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지난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해양환경관리법은 무분별한 해양이용행위에 대한 관리와 각종 해양오염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다에 배출되는 쓰레기나 오염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막는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조항, 기름오염 방제활동에 관한 조항 등 해양환경 관리사업을 강화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준설토의 해양투기나 해양자원의 이용·개발, 바다골재 채취 등 일정규모 이상의 해양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해역이용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했으며, 평가·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협의의견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면허취소, 사업중지, 공작물 철거, 운영정지, 원상회복 등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출범=1995년 7월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 방제대책의 일환으로 설립됐던 해양오염방제조합은 해양환경관리법을 설립근거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거듭난다. 3본부 2처 1센터 17팀, 12개 전국지사 체제에 485명으로 구성된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환경 보전·관리·개선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갯벌이나 생태계, 무인도서 관리, 수질오염도 모니터링, 갯벌 서식지 복원 등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사업들도 시행된다.

◇법안 여러 부처로 분산 시행=문제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해양환경관리법과 새로 출범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관할해야할 해양부가 농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로 나뉘게 돼 법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지 의문시된다는 점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법안의 관할은 크게 환경부가 하게 되겠지만, 선박안전 규정과 방제규정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농수산식품부 산하 해양경찰청, 일부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